

교장·교감·정부위원회 女 40% ↑

교장·교감과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장·교감과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이 각각 42.7%, 40.7%로 분석됐다. 또 국가직 과장급공무원은 16.4%,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은 14.8%, 공공기관 임원은 14.3%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목표치는 국가직 과장급공무원 15.7%,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13.9%, 공공기관 임원 13.4%였다.

여가부는 국가직 공무원 부문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점검 여성임원 최소1인 선임하도록 지침 제정

는 기관을 대상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대학정보공시지표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

검을 실시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확대하고 공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해 여성 임용을 확대했다.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경찰 부문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 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또 여성대상 범죄 지방청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여성수사관을 50%까지 임용한다. 정보경찰의 여성비율도 현재 5.7%에서 2020년까지 10%까지 확대한다.

경찰대학·긴급후보생 남녀통합

모집 체력기준(19년 적용) 및 경찰진 분야에 대한 통합모집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였고, 성평등 관악이 반영되도록 연구진 구성 시 성인지 분야 연구자를 포함하였다.

해양경찰은 올해 여성경찰관 채용 비율을 확대했으며 과출소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여성 리더십 교육을 최초로 개설했다.

정부위원회(500개)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은 40.7%로 법정기준(40%)을 준수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뉴스시

법 악용해 사무장병원 운영 70대 검거

조합원 300여명을 모으면 비의료인이라도 병원 설립이 가능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한의원을 설립 한 뒤 요양급여 6여원을 편취한 70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한의원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75)씨와 B(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서구 한 지역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동안 6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출자금 1000원 이상을 모으면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B씨를 통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300명을 채우기 위해 지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뒤 서류를 작성, 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운영했던 한의원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지난해 폐업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신청서류, 회의록,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광주시의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 전달 고교생 2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 B(18)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 사이 서울·대전·충북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가로챈 1억2700만원을 총액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착수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으며,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채팅 어플을 사용한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조한 금융감독원·경찰 서류를 갖고 다니며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피해자 서명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용돈을 벌기 위해 발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무통장 입금 한도를 피하려고 조직으로부터 수 백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내역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술집 주인 부부 폭행한 40대 취객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술집 주인 부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41)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구 금호동 B(60) 씨의 술집 앞에서 B 씨 부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1~3차례 때려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 씨는 술집 유리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B 씨 부부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배에 훈계해?” 후배 흥기로 찌른 60대 검거

선배에게 훈계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흥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흥기로 후배를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6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 B(58)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배가 휘두른 흥기를 피하던 중 목에 상처를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도철공 보복·보은 인사 조사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채용 비리와 성희롱, 하위 분양 연루 의혹에 이어 보복·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인사 부조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도시철도공사 보복·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 오는 13일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본부장급 간부가 강등 조치되고, 핵심 팀장들의 보직이 박탈된 것과 관련해 출세 우기 논란과 보복 인사 의혹의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총무팀장과 인사담당자를 각각 1급 처장과 2급 팀장으로 발탁 인사한 경우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상임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인사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의원을 사이에 협의를 거쳐 현장방문 조사를 결정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독기관인 시에 강력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관리감독 부서인 시 교통건설국도 보복·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은홍 기자



집중호우로 끊긴 다리 4일 오전 세종시 부강5리 세월교가 지난 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유실돼 끊기자 이 다리를 통해 밤에 가려던 한 주민이 되돌아가고 있다. 이 다리는 지난해에도 유실돼 보수공사를 했다.

‘광주 제석산 교회 신축 갈등 포출’...반대·찬성 측 집회

광주 남구 제석산 자락의 교회 신축을 놓고 반대 측과 허가를 촉구하는 단체가 4일 동시 집회를 열고 대립했다.

이날 오전 광주 남구청사 앞에서는 제석산훼손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교회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문교회 측이 동시 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시민대책위 측은 남구청사 앞에서 반대를 외쳤지만 교회 측은 건축허가 요구 집회는 이날 처음 열렸다.

각각 5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는 남구청을 가운데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 같은 시간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위는 “광주 의 경우 산림 난개발로 공원녹지 면적이 대도시 중 꼴찌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지역의 허파인 제석산이 대형교회 신축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혼잡한 곳이다”며 “이런 여건 속에서 대형교회가 들어서면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회 측은 “도심에 친환경 전원 교회를 건축해 남구민들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며 “이같은 계획을 갖고 10여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러 “교회가 매입한 땅은 제석산 아랫부분 1만6655㎡(5030평)이며 건축물은 990㎡(300평)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대지는 쉼터와 주차장, 등산로 등으로 조성할 예정인 만큼 산림은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지난 4월 교회 건축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반려했었는데 지난달 9일 재접수됐다”며 “향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중재를 먼저 한 뒤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서은홍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수탁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농에 부채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